

극우단체 댓글조작팀 여론 조작 ‘파장’ 민주 “국힘·김문수 가담 가능성 농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유사… 교육당국과 유착관계도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극우 성향 단체가 ‘자순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순간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 조작에 나섰다 는 보도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주 유세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극우 단체가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으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은 리박스쿨의 ‘자순군’과 무슨 관계인지 꼭바로 밝히라”고 말했다.

전날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의 단체가 ‘자순군’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실을 잠입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자순군의 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사무실을 방문했고, 하는 일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조력을 넘어 사주, 설계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댓글공작팀 ‘자순군’을 학부로 단체 소속으로 둔 갑시커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을 비판하는 ‘가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는 의혹도 거론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을 내란 연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후안무치한 내란세력의 공작을 응징하겠다”며 “수사 당국은 성

역 없는 수사로 여론 조작의 실체를 규명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단체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신속대응단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내란 정당성을 부여하던 세력이 조직적 댓글 작업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깊숙이 관련된 의혹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리박스쿨을 이끄는 손모씨가 김문수 후보와 친분이 있다고 스텝 없이 이야기했고,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알파팀장’ 이모씨가 김 후보를 돕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를 향해 리박스쿨과의 관계, 이씨와 후보 캠프와의 관련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리박스쿨 운영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일했다며 윤 장관과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하고, 방과후 수업 강사로 일하게 하며 아이들에게 극우 교육을 하도록 지시해왔다고 한다”며 “교육당국과 리박스쿨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선거대책위원회 호남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전주 풍남문광장을 방문해 지원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이재명 “댓글 조작은 반란행위”

<민주당 대선 후보>

“댓글 조작 잔뿌리까지 찾아내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과 관련성… 중범죄 행위 나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서 유세전을 펼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극우 성향 단체의 댓글공작팀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연루 가능성이 크다”며 공세를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택시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유세를 시작해 충북 청주시와 세종시, 대전에서 유권자들을 만났다.

그는 비상계엄을 겨냥해 “집 지키라고 쥐어준 총칼로 머슴이 주인을 겨눴다”며 내란 종식을 거듭 내세웠다.

이 후보는 “(내란을) 엄중히 처벌해 다시는 주인을 배신할 마음을 먹을 수 없게끔 해야 한다”면서 “공범들이 여기저기에 숨어있는데 다 찾아내서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내란수괴의 지지를 받으며 극우 아스팔트 전광판 옥사와의 관계도 단절 못 해 윤원서 비호해놓고, ‘내가 언제 윤했느냐’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기지 못하면 역사와 후손에게 대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하고, 압도적으로 심판·응징해 (내란을)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유세에서는 극우단체가

이른바 ‘댓글팀’을 만들어 대선 여론 조작에 나섰다 는 보도를 거론하며 “선 거결과를 망치려 하는 이런 행위는 반란행위 아닌가”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중대범죄 집단의 명칭이 ‘리박스쿨’이고 거기서 늘 불하고 고사를 양성했다는데, 거길 더 파보면 나라가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런 범죄행위로 나라가 입는 피해가 크다”며 “포상금을 5억씩 주더라도 제보를 받아서 막을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청주에서도 “자기 편을 만들고 대통령이 돼서도 그쪽을 특별 관리하고, 특히 주고 나쁜 짓을 시키고 이익을 주고 ‘리박스쿨’ 이런 것을 만들어 댓글을 조작하고 이런 것 되겠느냐”며 “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반통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청주 유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작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것도 국민의힘과 연관해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돈은 어디서 났고, 국민의힘과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일지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도록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광 활성화 · 미래산업 육성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박차

전북자치도, 정례브리핑서
2~6일 도정 주요 현안 설명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투어패스 프리미엄 관광상품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 육성과 수소 산업 기반 구축,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미래 전략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권순재 전북특별자치도청 보도지원팀장은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월 2~6일 전북자치도의 주요 추진 현안과 행사에 대해 기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권 보도지원팀장은 “전북자치도에서 시범 출시한 전북투어패스 프리미엄 관광상품권이 출시 한 달 만에 345매가 판매됐고, 이 중 177매가 사용됐다”며 “사용자 1인당 평균 7.5곳을 방문해 총 1,391곳의 관광지 이용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전북투어패스도 지난해 같은 기간(1~4월) 5,500매 판매에 비해 올올은 약 9,200매가 팔리며 3,700매 이상 증가, 전북 방문객 증가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전북투어패스 프리미엄업권은 1장당 2만2,900원으로 체류관광지 입장권과 카페에서 음료수도 구입할 수 있는 등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오는 6월 5일 오전에는 도지사와



권순재 전북특별자치도청 보도지원팀장이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6월 2~6일 전북자치도 주요 추진 현안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천년 명가 선정업체 대표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북 천년명가 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

30년 이상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온 소상공인 및 기업 승계자를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발해 최대 1,800만원의 경영 지원금과 함께 금융·마케팅·인증 등 다양한 육성 혜택을 도에서 제공할 방침이다.

같은 날 청정에너지수소과에서는 수소산업 미래를 이끌 ‘예비 수소 전문기업’ 15곳도 최종 선정한다.

올해 20개 기업이 신청한 가운데, 지난 5월 22일과 23일 평가를 시행했으며, 예비 수소기업 13개사와 확

대 전환기업 2개사 총 1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전북테크노파크(TP)와 연계해 기술성,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수소 산업의 미래 주자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범도민사 추진위원회’ 출범도 본격 준비 중이다.

IOC 창립일인 오는 6월 23일을 기념해 출범식을 열고, 도내·외 각계 인사 2,036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민·관 합동 유치 활동에 나선다.

권 팀장은 “국가사업 승격과 범정부 차원의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에는 ‘올림픽 데이런’ 등 기념행사도 계획돼 있어,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기반을 더욱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 도는 최근 발표된 일부 후보 공약집에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존 인구 기존 중심의 특례시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경쟁력과 발전 계획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지면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 특례시 지정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시 추진 사무 확대, 권한 제도와, 과감한 재정 지원 방안도 언급된 만큼, 전북자치도의 행정·재정 자율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자치도에서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산업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를 포함한 전북자치도 대표단은 오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바이오 USA’ 행사에 참석하고, 현지 협력 거점센터 개소식과 환경 리셉션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산업 교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대선 투표지 촬영 · 훼손 선거인 고발

“투표지 촬영하거나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서 엄격히 금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 및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전주시덕진구 소

재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했고, 이를 인지한 사전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삭제를 요청하자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회송용봉투에 들어 있는 본인의 투표지를 봉투째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2호 사목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

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투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중도중증장애인의 병원 밖 삶의 재설계

5일 도청서 ‘중도중증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정책세미나’

중도중증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삶의 재설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정책세미나’가 오는 5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수장애인의회와 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며,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중도중증장애인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행하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당혹스러워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병원 중심의 ‘의료재활’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직업·사회 재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주제 발표는 박준균 나사렛대학 교수(재활학 박사)가 맡는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퇴원을 재활의 ‘끝’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며, “중도장애인이 다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심리적 회복, 직장 복귀, 일상 적응훈련을 포괄하는 ‘전환재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미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환재활 모델도 함께 소개된다. 이들 국가는 병원 치료 이후 ‘심리재활·사회적응·직업훈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통합재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중도장애인의 원직장·원직주 복귀율이 90%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병원 퇴원 이후의 공백기가 길어지면 서 많은 중도장애인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재입원을 반복하여 환자화 가족, 사회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는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 최창현 장애인인권연대 대표, 김의종 서울시척추장애인협회 회장, 이찬우 대전사회복지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전북지역의 사회복귀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2026년 사업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체계적인 사회복귀 사업의 도입 필요성, △전문인력 양성(전환재활 코치, 재활상담사 등), △이동권 보장과 직장 내 환경 개선, △장애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 보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는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